

‘트럼프 관세 폭탄’... 中企, 대미 수출 1.2조 증발 위기

중기부,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
미국 수출액 최대 11.3% 감소 전망
전기전자·기계·車·화학 등 직격탄
金 “생산 감소·기지 이전 불가피”
뜻 “3500억 긴급경영자금 지원”

‘트럼프 관세’로 한국 중소기업의 미국 수출액이 최대 11.3%, 금액으로는 1조2000억원(8억5280만 달러) 가량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12일 오전 서울 63빌딩에서 개최한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중소기업 지원 간담회’에 앞서 산업연구원이 발제한 트럼프 행정부 추진 보편관세 정책이 우리 중소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 자료에서 나왔다.

수출액 감소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가장 유사한 시나리오를 가정해 캐나다·멕시코 제품에 25% 관세, 그외 국가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시 추산한 결과다.

산업연구원 김정현 연구위원은 “보편적 관세 부과로 인한 한국의 대미국 수출 변화 추정 결과 전기전자, 기계류, 자동차, 화학, 전기전자 분야 등의 대미 수출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중소기업 수출 감소뿐만 아니라 대기업 수출 감소로 인한 생산 감소,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대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등의 파급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기술보증기금서울지점에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중소기업 지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연구위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파급효과를 비교해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약 2배 가량 크게 나타난다”면서 “이는 대기업 위주 최종재 및 준최종재 수출 감소로 인한 생산파급효과가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에 따른 고환율 등 최근의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트럼프 2기 대응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관세정책 등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이 우리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자리에선 트럼프 2기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이 당면한 어려움 완화를 위해 2월 중 발표예정인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먼저, 중기부는 단기 수출현안 대응을 위해 전국 13개 지방중기청에 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해 고관세, 고환율, 공

급망 재편에 따른 영향 등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접수와 상담을 추진한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 금융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위기가 심화되는 경우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지방청에 있는 애로 신고센터를 통해 매주 현장 목소리를 파악·검토하고 분류한 결과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올해 배정한 35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수출 애로기업들을 단기적으로 지원하는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또 우리 중소기업의 탄탄한 수출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한다.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테크서비스 수출, 해외진출, 신한류품목 육성 등으로 수출 정책 외연을 확대한다.

또한 아세안, 중동 등 신흥시장별·지역별 수출 전략을 새롭게 추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 하기위해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원팀 협의체’ 지원 기능을 강화시켜나갈 계획이다.

오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등 통상 정책 변화가 우리 중소기업들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 부처와 공동 대응하고 있다”며 “신보호무역주의가 우리 중소기업에 도전적인 상황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지원 대책을 이달 내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자리에선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애로를 호소하고 정책 지원을 추가로 요청했다.

아이텔 이재식 대표는 “우리는 멕시코에서 제품을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멕시코가 (원자재 수출에 대해) 35%의 관세를 앞서 부과했다. 직격탄이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면 우리 생산량을 줄이고 미국 수출이 줄어드는 등 추가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관세에 대해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금융 관련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백파이테크 신용철 대표는 “800달러 이내의 소액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가 관건”이라며 “관세를 부과한다면 이를 피할 수 있는 루트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 아울러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하는 수출바우처에서 마케팅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과워플레이어 김유재 대표는 “정책 자금을 통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아마존 등 글로벌 대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수출 판로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중앙회, 韓-오만 中企 협력 방안 모색

김기문 회장, 오만 상의 회장 등 간담회
오만, ‘백두포럼’ 무스카트 개최 요청
金 “협력 확대하면 양국 상호발전 가능”

중소기업중앙회가 오만과 양국 중소기업 협력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2010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글로벌 포럼인 ‘백두포럼’을 올해엔 오만에서 열 가능성도 크다.

중기중앙회는 김기문 회장이 오만을 방문해 파이잘 압둘라 알 라와스(Faisal Abdullah Al Rawas) 오만 상공회의소 회장 및 카이스 빈 모하메드 알 유세프(Qais bin Mohammed Al Yousef) 오만 상무부 장관과 잇따라 간담 자리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파이잘 알 라와스 오만 상의회장은 김 회장에게 “뛰어난 기술을 가진 한국의 중소기업이 오만에 진출하는 첫걸음으로 ‘제16회 백두포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이 카이스 빈 모하메드 알 유세프 오만 상무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을 다른 곳이 아닌 오만 무스카트에서 꼭 개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그는 “오만 대표단이 올해 4월 일본 오사카 엑스포를 방문하기 전에 한국을 들러 양 단체에서 서로가 원하는 업종에 대한 리스트를 공유해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튿날 이어진 간담회에서 카이스 알

유세프 오만 상무부 장관은 “오만 상의의 백두포럼 무스카트 개최 제안을 알고 있으며, 오만 정부 차원에서 투자설 명화와 진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하며 오만과 한국 정부 간의 가교 역할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오만과 미국은 FTA가 체결돼 미국이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으므로 한국기업이 무스카트에서 제품을 생산해 수출하면 한국에서 수출하는 것보다 유리하고, 파키스탄과 스리랑카 등에서 값싼 노동력 공급도 가능해 한국 중소기업과 협력할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오만이라는 나라는 한국 기업인들에게 낯선 부분도 있지만 양 기관에서 백두포럼의 오만 개최를 강력히 요청하는 만큼 단순 제품 수출뿐만 아니라 현지 기업과의 합작 투자 등 협력을 확대하면 양국 기업이 상호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현대리마트, AI 활용 ‘맞춤형 쇼핑’ 돕는다

‘리마트몰’ 회원 개인화 페이지 제공

현대리마트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를 운영하며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리마트는 AI 기술과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별 최적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맞춤형 쇼핑’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현대리마트 공식 온라인몰인 ‘리마트몰’ 회원을 대상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콘텐츠·이벤트 등을 큐레이션해 개인화된 페이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리마트몰 상단 ‘맞춤형 쇼핑’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고객이 리마트몰에서 ‘관심 공간’, ‘선호 인테리어 스타일’, ‘선호 가구 색상’, ‘가족 구성’, ‘공간 크기’ 등 다섯 가지 문항에 답변을 하면 AI가 해당 답변과 고객의 리마트몰에서의 구매 및 검색 이력 같은 활동 기록을 분석한 후 사용자 취향에 맞도록 예상되는 제품이나 프로모션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김승호 기자

韓 100대 기업, 공급망 ESG 공시비율 54%

동반위, 매출 상위사 관련 공시 분석

국내 100대 기업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공급망 ESG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공시한 기업은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망 ESG 관리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은 높지만 절반 가까운 기업은 여전히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이같은 내용은 동반성장위원회가 국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ESG 관리 공시 수준’을 조사해 12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는 동반위와 대신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지난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자율 공시한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공급망 ESG 13개 프로세스 공시율을 분석한 결과, 기초적인 ESG 관리 활동은 비교적 잘 수행되고 있지만 리스크 평가 및 관리 체계는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시율이 높은 항목으로는 ▲행동규범 제정(84%) ▲파트너사 체크리스트 개발(82%) ▲파트너사와 소통·지원(68%) 등이 있으며, 이는 기업들이 기본적인 ESG 관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ESG 리스크 관리(20%) ▲위험군 파트너사 식별(30%) ▲파트너사 ESG 관리 성과 종합분석(25%) 등은 공시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공급망 리스크 평가 및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

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급망 ESG 관리 수준을 평가한 25개 체크리스트를 분석한 결과 파트너사의 ESG 리스크를 식별·관리하고 시정조치를 수행하는 역량이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조사됐다.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파트너사의 ESG 리스크 식별시스템(11%), 식별 프로세스 가이드 제정(35%), 위험군 파트너사 식별절차 보유(30%), 고위험군 파트너사 시정조치계획(CAP) 관리시스템(17%) 등 전반적으로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한 상황이다.

대신경제연구소 안상희 센터장은 “100대 기업의 공시 수준은 우리나라 ESG 경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며 “기업들은 공시 비율이 비교적 낮은 공급망 리스크 관리에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내 기업들이 그 린위험, 분쟁광물, 인권 보호, 안전 문제 등 공급망 내 다양한 리스크를 인식하고 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급망 리스크 관리와 공시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동반위 박치형 운영처장은 “ESG 경영이 기업에게 지나치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동반위는 국내외 ESG 법·제도에 맞춰 공급망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나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